

# 우리나라 식생활 개선 정책의 시대적 변화에 대한 고찰

Evaluation on Food Policy classified by period on Korea

한국식품연구소  
책임연구원 계 승 희  
공주대학교 산업과대학 식품영양학과  
부 교 수 김 명 희

Korea Advanced Food Research Institute  
Senior Researcher : Kye, Seung Hee  
Dept. of Food & Nutrition, Kongju National Univ.  
Associate Prof. : Kim Myung Hee

## 〈 목 차 〉

I. 서 론	IV. 요약 및 논의
II. 연구방법	V. 결 론
III. 식생활 배경에 따른 식생활 정책의 변화 추이	참고문헌

## 〈 Abstract 〉

The change in the police concerning food and dietary life were analyzed in order to provide bases of establishing policy of food and dietary life properly.

The last half one century was divided into six periods as follows ; The period since liberation from Japanese rule (1945-1949), the 1950's (1950-1959), 1960's (1960-1969), 1970's (1970-1979), 1980's (1980-1989), 1990's (1990-1992).

Dietary life by 1960's were a life of distress and policies conducted by government took on an relief supply of food at this period. Movement about '*intake of mixed rice with barley and foods prepared from flour*' to supress rice consumption were encouraged by government. And Korean recommended dietary allowance was made and the national nutritional survey was practiced in the first place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Dietary life of the country begin to improve sharply along with rice self-sufficiency since 1975. With the growth of food and eating out industry, intake of instant food, processed food, and fast food has increased at the 1980's.

The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drove campaign of '*Joo-Moon Sik Dahn Je*' for dietary life improvement at 1981. The Ministry of Education made and announced a '*School Feeding Law*' at 1981. The government , that is, the Office of

Premier and the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developed campaign for improvement of dietary life and drove 'Jo Eun Sik Dahan Je' with Association of restaurant jointly.

Policy on food and dietary life conducted by government up to date were planned mainly dependent on food production, supply and demand of food. Infectious diseases continue to decrease with increasing of degenerative diseases, which will be required proper management of dietary life.

In the future, more aggressive, intergrated food policy are needed to maintain the public health. Also dietary improvement movement should be drived actively.

## I. 서 론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후기부터 주·부식의 일상식 구조가 확립되어 곡물로 밥을 짓고 장·젓·포 등의 가공이 이루어지면서 밥을 주식으로, 기타 식품을 반찬거리로 하는 한국의 기본 식품구조가 형성되었다.

그 후 조선시대에 확립된 한국 전통의 반상차림은 3, 5, 7, 9, 12첩 등으로 밥, 국, 김치를 제외한 반찬의 수에 따라 구분되었으며<sup>1)</sup>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5첩과 7첩이라 여겨진다. 반상은 한상에 모두 모아 차리는 공간 전개형의 식사 형식으로 정착되었고 밥과 반찬은 영양, 맛, 그리고 시각적 다양성과 조화성 아래 균형을 꾀하였다. 그러나 우리 선조들의 식생활은 음식의 질보다는 양에 치중하였으며 생명의 기본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식(食)의 단계였다. 일제의 침략과 8.15 해방, 6.25 동란 중과 휴전 이후의 궁핍한 식생활은 농업부진과 농산물 흉작으로 이어지면서 더욱 식생활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러한 식생활은 19C 말엽에 서양의 식품, 요리법, 식생활 관습 등이 전해지면서 이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다. 60년대에 시작한 분식장려 운동<sup>2)</sup>으로 주식의 일부가 빵, 국수 등으로 대체하게 되었으며 70년대에 이르러 우리나라 경제개발이 급진전하면서 국민생활이 두드러지게 향상되기 시작하여 생명유지와 생리적 요구를 충족하는 궁핍한 식생활로부터 풍요로운 식생활로 크게 변화하였다. 80년대에 이르러 고도의 경제성장과 산업화에 따른 근대화의 물결은 인스턴트 식품, 냉동식품 등 편의식품 (Convenience Foods)과 새로운 식품산업, 외식산업의 발달 등 식

생활 혁신을 빠르게 진행시켰다.<sup>3)</sup> 특히 '86 아시안 게임과 '88올림픽 경기 등은 우리의 식품산업과 외식산업의 붐을 가속화시키고 우리 식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90년대에 들어와서는 식(食)을 하나의 레저화로서 즐기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와같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식생활과 관련된 정책에도 많은 변화<sup>2,4-9,10,11,13)</sup>가 있었다. 지금까지 추진되었던 정책들은 주로 구호급식과 식품수급에 의존하여 수행되었으며 국민건강과 관련하여 식생활 개선 측면에서 추진되었던 정책들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식품 및 건강과 관련된 정책의 수행과 발전의 필요가 점차로 증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난 반세기동안 식생활 배경에 따라 수행되었던 정책들을 분석 평가하여 앞으로의 식생활 정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 II.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해방 후 1945년부터 1992년까지 47년간, 3개부서 (보건사회부, 농림수산부, 교육부)에서 식생활과 관련되어 행해졌던 정책자료를 실은 문헌 23종을 시대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시기 구분은 다음과 같다.

- 1) 해방 후 시대 (1945-1949)
- 2) 1950년대 (1950-1959)
- 3) 1960년대 (1960-1969)
- 4) 1970년대 (1970-1979)

5) 1980년대 (1980-1989)

6) 1990년대 (1990-1992)

지금까지 정부에서 수행하였던 정책에 관한 자료들은 완전히 구득할 수 없었으며 그나마 얻을 수 있었던 자료들은 비교적 최근의 자료로 국한된 것이었다. 따라서 미흡한 내용은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자료를 구하였으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서 자세히 서술하지 못한 내용도 있음을 밝힌다.

### Ⅲ. 식생활 배경에 따른 식생활 정책의 변화 추이

#### 1. 해방 후 시대 (1945-1949)

8.15 해방을 맞아 식민지 경제체제 아래서 일본과 맺어져 있던 경제 순환이 단절됨으로써 한국 경제는 자본, 기술, 시장 등 제반 측면에서 인플레이의 현상, 적자재정의 만성화, 국제수지의 역조 등 어려운 문제를 안게 되면서 식생활도 매우 궁핍하였다. 일본의 미곡수탈을 위한 산미증식계획(産米増殖計劃)은 3.1운동 직후인 1920년에서부터 15년간 계속되었으며 대부분의 농민들은 초근목피(草根木皮)로 연명을 해야했다.<sup>4)</sup>

해방후 미군정(美軍政)은 1945년 10월에 소작료(小作料) 3·1제 실시와 양곡 통제 해제를 발표한데 이어 1946년 1월에는 「미곡수집령(米穀收集令)」을 제정하고 양곡통제로 복귀한다. 이어서 1947년 9월에는 「미곡법(米穀法)」을 공포하여 식량 통제기능을 한층 강화하였다. 1948년 미군정이 종료되고 한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농림부에 양정국(糧政局)이 설치되고 양정업무 일체를 관장하였다.<sup>10)</sup> 정부는 우선 미군정의 「미곡수집령」을 폐기하고 1948년 10월에 「양곡매입법(糧穀買入法)」을 공포하였는데 식량의 전면 통제를 실시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식량의 전면 통제가 실패하자 1949년 7월에는 식량 긴급 조치법을 제정하여 양곡의 자유시장을 허용하게 되고 이어서 1950년 2월에 「양곡관리법(糧穀管理法)」을 제정함으로써 양곡관리 정책의 출발점을 마련하였다.<sup>15)</sup>

이 시기에 정부에서는 식량배급제도를 통해 민생고(民生苦)를 해결하려 하였으며 1949년 9월에는 부족한 식량을 메우기 위하여 ‘낮술 판매 금지’, ‘밀을 수출한 자는 양곡 관리 법령에 의해 사형에 처한다.’ 등의 정부방침이 발표되기도 하였다.<sup>4)</sup>

#### 2. 1950년대 (1950-1959)

1950년에 일어난 한국전쟁은 해방후의 어려웠던 식생활을 더욱 가중시켰다. 농업 분야에서도 수리시설의 파괴를 비롯해서 많은 피해를 늘게했을 뿐 아니라 군량미 구호곡(軍糧米 求護穀)의 수요 등 양곡수요 급증으로 심각한 수요 불균형을 야기 시키게 되었다.<sup>15)</sup> 이 시기는 절대 결핍시대로 6.25 동안중의 기아 및 준기아생활, 휴전과 허탈상태 속에서 영양실조는 계속되었다.

이때 학교급식이란 명목으로 구호급식이 시작되었는데 1953년에 국제연합아동기구(UNICEF)를 중심으로 외국 원조 급식 양곡지원에 의한 학교급식이 시작되었다. 이 구호급식은 6.25 전쟁 후의 아동 구호와 학교 결석생수를 줄이는데 크게 공헌하게 되었는데 1953년에 시작된 이 원조는 1972년까지 20년간이나 계속되었다.

1966년도부터는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지원하에 탈지분유, 옥수수가루, 식용유, 소맥분 등으로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제공한 부분 급식도 실시되었다.<sup>6)</sup>

또한 1955년 5월 31일 당시에 체결된 「미공법(美公法) 480호(US public law 480)」에 따라 정부는 미국의 잉여농산물을 도입하였다. 「농업교역증진(農業交易增進) 및 원조법(援助法)」이라는 이름을 지닌 미공법 480호는 1954년 7월에 제정되었는데 미국과 우방국과의 교역 확대, 미국 잉여 농산물의 합리적 활용, 우방 제국의 경제개발 촉진, 전략물자의 구입 및 미국의 해외부담금 지불을 위한 현지 통화의 사용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는데<sup>16)</sup>, 이때에 도입된 미국 잉여농산물의 양은 1956년-1964년 사이에 쌀·소맥·대맥 등을 합쳐 총 50 - 60 만톤에 달했다. 이러한 양은 국내 총 곡물 생산량의 40 %를 차지하는

양으로 이 민족의 식량난을 해결하는데 크게 공헌하였으며<sup>4)</sup>, 동협정에 의한 미국 잉여 농산물의 대량 도입은 정부 관리 양곡의 확보는 물론 저곡가 정책의 추구를 더욱 용이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의 무상 잉여 농산물 도입 정책으로 인하여 농민들의 생산 의욕은 극도로 저하되었다.

### 3. 1960년대 (1960-1969)

1960년대 초에는 한국인의 식량소비는 쌀과 보리 쌀이 주종을 이루었고 이들 곡물의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었다. 전쟁 피해 복구 단계의 외원식량 및 설상가상으로 극심한 한발과 수해 등에 의한 농업 부진과 농산물 흉작은 60년대까지 계속되었으며 60년대 중반을 고비로 회복시대에 접어들었다. 또한 유제품과 식용유, 통조림, 라면 등 가공식품 시장이 서서히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식품을 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 식품이 생산되지 못했으며 그 중에서도 우리의 주식인 쌀의 공급을 충분히 할 수 없었다. 그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국민들에게 분식과 보리혼식을 장려하였다.

「분식장려운동」은 1960년대에 이르러 시작되었는데 이 운동의 목적은 쌀소비를 절약하고 미국으로부터 도입된 잉여 농산물중 밀이 압도적으로 많은 양을 차지하게 되자, 우리 전통적 식생활의 주식 일부가 밀가루를 소재로 한 빵, 국수, 만두로 대체되는 방향으로 정부 주도하에 시작된 운동이다. 1963년도에 도입된 미국 잉여 농산물 1,023,000톤 중 774,000톤이 밀로 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사정에서 정부주도하에 시작된 분식장려 운동은 보리 혼식 장려와 함께 범국민적으로 추진되었다.<sup>5)</sup> 이 시기에는 밀가루 음식이 마치 균형잡힌 식사의 표본인양 강조된 반면 쌀밥은 그에 훨씬 못미치는 것으로 선전되었다. 그러나 쌀과 밀가루의 단백가를 비교해 볼때 쌀은 58, 밀가루는 34로 밀가루가 쌀보다 더 단백질이 떨어지고 필수아미노산도 쌀에서 그 함량이 훨씬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sup>6)</sup> 따라서 이 때의 식생활 개선 방향이 다분히 정책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의 영향으로 국민들은 빵, 국수, 만두, 과자등 밀가루로 된 음식을 즐겨 찾게 되었고 입맛도 바뀌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쌀밥 중심의 전통 식습관이 크게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같이 쌀의 섭취를 줄이는 반면 육류섭취를 늘리고 밀가루 음식을 즐기는 식습관은 1970년대에도 계속되었다.

1963년도에 우리나라 전체 양곡의 자급율은 75.5%에 불과하였다.<sup>14)</sup> 이에 농수산부는 그해 1월부터 「전국 절미운동」 및 「양곡소비절약운동」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 운동은 곡물 공급량의 절대부족으로 정부는 식량 공급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식량소비의 합리화에 주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전국 절미 운동 요망(全國 節米 運動 要綱)”을 제정 발표하였는데 그 요망은 양곡상은 쌀 8할 이하, 잡곡 2할 이상의 비율로 판매, 음식점등 접객업자는 잡곡 2할 이상을 혼식, 각 가정은 2일 1식의 분식을 장려, 미곡을 원료로 하는 주정 제조는 1963년 10월 말까지 일절 금지, 각 공공기관의 구내식당에서는 밀가루와 잡곡을 사용하게 하고 미곡을 원료로 하는 엿, 떡등은 모두 잡곡으로 대체하게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이와 같은 절미운동은 1월부터 재건 국민 운동 본부가 주관하여 서울, 각도와 시군에 식생활 개선 위원회를 두고 각 관공서, 학교, 공공단체를 총동원하여 강력하게 추진하였다.<sup>2)</sup> 보리혼식의 장려는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서 교사의 지도하에 학생들은 쌀과 보리의 혼합 비율을 7대 3으로 도시락을 싸오게 되었다.

특히 정부는 소맥분의 대량공급을 위하여 소맥의 도입을 강화하였고 소맥분의 「공장별 생산 책임제도」를 실시하고 서울과 부산에서 대량 수요자와 특정수요자에 대하여 전표제도에 의거 고시가격으로 판매하도록 하는 한편 종래 3등급으로 생산하던 소맥분의 제분수율을 일률적으로 85%로 인상하고 단일제품을 생산하도록 하였다.<sup>2)</sup> 이러한 「양곡소비절약운동」은 1963년 이후 매년도 양곡수급사정의 변천에 따라 약간의 수정이 가해지면서 계속되었으나 1965년도 및 1966년도에는 연중곡가가 비교적 저렴한 선에서 안정되었으므로 일반적인 소비 억제책으로는 효과가 적었다.

미곡(米穀)의 1인당 연간 소비량은 1965년 121.8kg에서 1970년 136.4kg으로 증가하였다.<sup>5,14)</sup> 이와같이 증가하는 미곡소비의 증가 추세하에서 미곡의 수입 또한 6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양곡 생산도 부진을 면치 못함에 따라 양곡 수요 정책에 차질이 발생하자 정부는 이를 미곡 소비 억제와 외국곡의 도입으로 극복하고자 했다.

1968년도 가뭄으로 인하여 미곡 생산량이 평년작에 비하여 15%나 감소하여 3,195천 M/T에 불과하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농수산부는 1969년 1월 23일에 식량 부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양곡관리법 제 17조와 동법시행령 제 15조 및 제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곡 소비 억제를 위한 행정명령」을 고시하였다. 그 내용은 모든 음식 판매업소에 대해 25% 이상의 혼식을 의무화하고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11시부터 17시까지는 쌀을 원료로 하는 음식을 팔지 못하게 하는 등 미곡 소비 억제를 법적 규제에 의해 강제적으로 시행하였다. 또한 보리쌀의 혼합물의 제고를 통한 쌀의 소비 절약을 위해 맥류의 미곡에 대한 상대가격을 인하하는 가격 정책을 채택하면서 민간의 절미운동도 전개하였다.<sup>15)</sup>

1960년에는 보건사회부에서 우리 국민의 「한국 잠정 영양기준」을 마련하였으며 1962년에는 FAO 한국협회에서 최초의 공식 한국인 영양권장량을 마련하였다. 25세의 성인남자를 대상으로 1일 에너지 2,900 kcal, 단백질 70g을 섭취하도록 권장되었는데 이 열량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준<sup>17)</sup>에 비해 400 kcal 가 높은 수준이었다.

1960년도 후반에서부터 국민들의 영양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1969년도부터는 매년 정부 주도하에 한국인 영양조사가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1987년까지 1,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것을 1988년부터는 2,000가구를 대상으로 확대하였으며 그 결과는 매년 국민영양조사 보고서로서 발행되고 있다.

#### 4. 1970년대 (1970-1979)

1970년대 초반에는 식량 사정이 악화되었으며 정

부의 식량수급계획은 양곡 위주의 수급계획이었다. 그러나 농촌의 소득 증대와 생활개선을 위한 「새마을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비의 다수확 품종인 통일벼 도입, 고미가(高米價)정책에 따른 농업소득의 증대로 1975년 이후 쌀이 자급되고 여유가 늘어나게 되고 우리나라 경제개발이 급진전하면서 국민 생활이 두드러지게 향상되기 시작했으며 생명유지와 생리적 요구를 충족하는 저조한 식생활로부터 풍요로운 식생활로 크게 달라지게 되었다.

특히 우리의 주식인 쌀은 고급식품 섭취량 증가와 육체노동 감소로 1인당 쌀소비량은 감소하게 되었다.<sup>16,20)</sup> 또한, 종래 소규모의 수공업 형태였던 식품산업이 대규모로 공업화됨에 따라 인스턴트식품, 냉동식품 등 각종 편의식품들이 식생활에서 중요한 비율을 차지하게 되었다.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1970년도 초반 하더라도 정부의 식량수급 계획은 양곡위주의 수급계획이었고 양곡정책이 곧 식량정책이었다. 그러나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식품소비구조가 고급화 또는 다양화됨에 따라 정부는 1974년 7월에 식량수급계획의 대상품목을 확대하여 육류, 계란, 어패류, 채소, 과일 등의 종합식품수급계획(綜合食品需給計劃)으로 대체하였다.<sup>14,25)</sup>

정부는 양곡의 증산정책과 동시에 미곡의 소비절약 정책도 추진하였다. 1969년에 실시하여 1976년까지 지속된 「혼분식 장려 정책(混粉食 獎勵 施策)」은 식량사정의 악화로 쌀 소비 절약을 위하여 추진되었는데 1979년 11월에는 요식업소로 하여금 매주 2회씩 혼식 및 인조미 20% 혼합을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식량사정이 더욱 악화되자 1973년 3월에는 요식업소의 혼식 혼합 비율을 종래의 25%에서 30%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쌀을 원료로 하는 과자류 및 면류의 생산 금지 조치를 단행하였다. 1974년 5월에는 정부 미 방출을 전량 혼합곡(混合穀)으로 바꾸고<sup>15)</sup> 1974년 12월에는 행정명령을 개정하여 쌀 도정도를 종전의 9분도에서 7분도로 하향조정하였고 음식점에서 공기밥 사용을 의무화시켰다. 또 떡 제조시에 보리쌀을 30% 혼합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도 하였다.<sup>26)</sup>

정부는 또 여성단체와 새마을 조직을 이용하여 「식

생활 개선 운동」과 「혼분식 운동」을 전개하고 식생활 개선 업무의 강력한 추진과 단속을 철저히 하기 위해 농수산부와 각 시도에 고발센터를 설치하기까지 하였다.<sup>15)</sup>

1인당 연간 쌀 소비추세의 감소와 함께 정부의 증산 노력의 일환으로서 통일계 신품종의 개발 및 보급이 이루어지고, 70년대에 들어오면서 생산량도 급격히 증가하여 1975년도 이후 쌀이 자급되고 여유가 늘어나자 정부에서는 쌀소비억제책을 완화하였다. 따라서 1977년 10월 15일에는 7분도 도정율 규제를 해제하고 쌀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소비 허용 등 쌀소비 규제 조치를 전면적으로 해제한 결과 쌀소비량은 다시 증가 추세를 나타내었다. 혼식도 음식점에서 강제했던 것을 권장으로 완화하였으며 과사류의 쌀사용을 허용하였다. 이와함께 떡 제조시의 보리쌀 혼합 규정을 해제하였으며 즉석 술밥도 허용하였다. 1977년에는 미국의 대풍으로 정부는 쌀 막걸리 제조를 허용하였고 혼분식 단속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sup>2)</sup>

그 후 쌀소비가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맥류 잡곡을 기피하는 등의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일어나자 정부는 1979년 11월에 다시 잡곡 혼식을 의무화하고 방출곡도 가급적 혼합곡으로 방출하는 등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학교급식의 경우 1972년 외국원조가 끝남과 동시에 국고부담으로 급식을 실시하긴 했으나 예산액이 적어 도서벽지 아동과 극빈 아동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빵, 건빵) 하던 중 1977년 서울 시내에서 빵식중독 사건으로 학교급식이 폐지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 구호의 성격을 탈피하고 한국적인 학교급식 형태를 개발하고자 학교실습지와 유희인력으로 자활급식 실험학교 (현 농어촌 급식 학교)를 설치하여 운영하게 되었다.<sup>6)</sup>

##### 5. 1980년대 (1980-1989)

고도의 경제성장과 산업화의 급격한 신장에 따라 여러가지 사회·경제적 요인과 국민의 식(食)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국민 즉 소비자

의 필요는 식품산업, 식품서비스산업, 외식산업 등의 식생활 혁신 산업을 발전시키고 특히 각종의 국제적인 행사와 아시안게임, '88올림픽 등의 국제 운동경기의 국내 유도, 그리고 국제규모의 관광산업은 더욱 식품산업과 외식산업의 붐을 가속화 시켰다. 인스턴트식품, 가공식품, 패스트푸드식품 섭취도 증가하였다.

외식일반화의 확대를 촉구하는 여러가지 요인, 즉 소득증대와 생활수준의 상승, 소비내용의 변화, 여성의 직장진출과 사회참여 증가, 사회의 레저지향화 등으로 외식의 비중이 높아지면서<sup>16,20)</sup> 외식소비지출 내용도 다양해졌으며, 유통면에 있어서도 외식의 업종 및 업태도 상당히 다양해졌다.<sup>20)</sup> 이와같이 매년 증가되는 외식산업에 대한 재인식의 필요성과 '88 서울 올림픽을 대비하여 전근대적이고 낭비적인 음식점의 음식제공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에서는 1988년 1월에 「식찬별 고객 주문식단제」를 보급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주문식단제」는 모든 음식은 개인별 찬기 또는 개인별 복합찬기 제공 (공동제공시 덜어 먹을수 있는 국자, 집게, 접시 등 기구제공), 기본찬을 5찬 이내로 제한, 백반정식은 3찬의 추가가 가능, 기본찬의 초과 제공시는 찬별로 주문에 의하여 별도로 제공 (한정식은 상단위로 주문), 건본대 설치, 찬별 차림표 및 주문전표 배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데 정부는 주문식단제의 실시로 의식개혁 차원에서 국민 식생활 관습 개선, '86·'88 올림픽을 대비하여 집객업소의 기존 식단 개선, 낭비없는 식단체 및 깨끗한 음식, 친절한 음식점에 대한 효과를 기대하였다. 이 제도는 위생적이며 식량절약에 대한 장점을 지녔으며 강력한 행정지도로 올림픽 기간중에는 어느정도 성과가 있었지만 가정에서의 공동찬 식사관습, 고객들의 푸짐한 음식 제공에 대한 동경 등 우리나라의 종래 식습관과의 차이에 따른 식당 이용객의 인식 부족 및 식기세척 등 인력소요, 건본대 설치, 기재 구입비 등의 경제적 부담, 업주의 인식 부족, 올림픽 이후의 자율화 분위기 등의 이유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문교부 (현 교육부)에서는 1981년 1월 29일에 「학교급식법」을 제정·공포하여 영양기준량을 제정하였

다. 1980년대는 학교급식의 목적 및 필요성을 인식하여 학교급식제도가 확립된 시기로 보충급식에서 완전급식으로 전환되었으며 공립학교에서만 실시하던 급식을 국립학교와 사립학교까지 확대 실시하게 되었다.<sup>6)</sup>

또한 급식형태와 관리측면에 큰 변화없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1982년 3월 체육부로 이관되었다가 다시 1990년 2월부터 문교부로 재이관되어 보통교육과 의무교육과에서 관장하였으며, 1990년 12월 27일에 문교부가 교육부로 바뀌면서 교육부 의무교육과에서 관할하게 되었다.<sup>6)</sup>

## 6. 1990년대 (1990-1992)

1990년에는 국민의 1인당 GNP가 5,659 달러, 1991년에는 6,498달러로 국민의 1인당 GNP가 약 5,000달러를 넘어서면서<sup>29)</sup> 식사도 미식을 위주로 선택하는 시기이다. 기능성식품과 무공해식품 및 냉동식품에 대한 관심증가와 균형된 영양 섭취를 고려하게 되었고 국민의 식품, 영양 섭취 상태가 매우 호전되었다. 그러나 일부 취약 계층에서는 아직도 필요한 에너지나 영양소의 과다섭취 경향이 증가하고 영양 섭취의 불균형현상이 초래되고 있으며 건강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자연식과 건강식, 건강보조 식품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주요 사망 원인으로 전염성 질환, 기관지염, 결핵 등의 비율이 상위권을 차지하였던 1950-1960년대와는 달리 1970년 이후부터는 뇌혈관질환, 악성신생물, 고혈압과 같은 질환이 높은 순위를 나타내게 되었으며 불규칙한 식생활에 의한 성인병 발병율이 높아지게 되면서<sup>30)</sup> 올바른 식생활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에서는 1990년 12월에 식생활지침<sup>31)</sup>을 작성 발표하였는데 이는 앞서 1986년에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한국인을 위한 식사지침'<sup>32)</sup>의 10개 항목보다 항목수가 줄은 5개 항목으로 정해져 있다.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 및 일부 국민들의 불필요한 식습관의 잔존, 음식의 과소비로 전체 생활쓰레기 중

가정이나 음식점에서 음식물 조리과 관련한 쓰레기가 1990년에는 전체 생활쓰레기의 27.4%나 되는 분량으로<sup>34)</sup>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1991년에는 새질서·새생활 운동의 일환으로 건전 소비생활 정착을 위한 음식물 아끼기 운동으로부터 출발하여 장기적으로는 국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식생활 관습 개선과 예절함양 등 식생활 문화개선 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음식점의 과다한 반찬제공 관행으로 자원의 낭비와 음식쓰레기에 의한 환경오염, 남은 음식 재사용에 따른 위생문제 등 제반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범 국민적 차원에서 정부는 1991년 8월에 '표준식단제 실시' '모범음식점 지원 육성'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sup>33)</sup>을 세워 실천해 나가되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아래 식생활문화개선을 국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계획하였다. 1991년 10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각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식생활문화개선지원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식생활문화개선정책 건의와 중앙과 지방의 추진상황 점검 지도, 행정 지원시책 협의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표준식단제」는 「좋은식단제」로 개칭·구체화되어<sup>35)</sup> 1992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sup>8,9)</sup>

현재 전국 요식업소에서 자율적으로 실시 추진중이며 신문, 방송 등 언론 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와 요식업주에 대한 교육으로 어느정도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식생활 개선 운동은 쓰레기 줄이기 운동과 연계하여 범국민 운동으로 확산 조기 정착 중에 있다. 이와 함께 보건사회부에서는 음식의 맛, 시설환경, 주방, 종업원 서비스, 가격, 「좋은식단」 실시 상황 등을 감안하여 업소수의 5% 내외에서 모범식당을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보건사회부와 협의하에 문화부에서는 시·도 별로 전통음식점을 지정 육성하고 있다.

## IV. 요약 및 논의

해방후부터 1990년대까지의 시대적 배경 및 식생활 정책의 수행 내용을 <표 1>에 요약하였으며, 보건사회부와 농림수산부에서 추진하였던 식품 관련 행정의 변천사를 각각 <표 2>와 <표 3>에 제시하였

다. 이들 결과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정부에서 추진 하였던 식생활 관련 정책들은 그 시대의 식생활 배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시대별로 살펴볼 때 수행되었던 정책 내용들이 단지 식(食)형태로서의 육구층주의 목적에서 벗어나 점차로 건강 유지를 위해 올바른 식생활의 정립을 목적으로 변화해 가는 과도기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4〉와 〈표 5〉는 년도별로 전체 양곡의 자급율 및 양곡의 1인 1년간 소비량의 추이를 나타낸 결과이다.

1950년대에는 식량 획득을 위해서 국내에서 자급을 계획하기보다는 외국의 원조를 얻기가 훨씬 수월하였고, 이와같은 정책의 결과는 농부들의 식량생산 의욕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1960년대 초에는 한국인의 식량 소비가 쌀과 보리쌀이 주종을 이루었고 이들 곡물의 공급량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라서 정부는 이를 미국 소비억제와 외곡의 도입으로 극복하고자 하였다. 1970년대 초반에도 식량사정이 악화되어 혼분식 장려 시책은 1976년도까지 지속되었으나 1975년도에 쌀이 자급되자 정부에서는 쌀 소비억제책을 완화하기도 하였다

1970년대 중반까지 실행되었던 식량정책은 양곡위주의 식량수급을 위한 정책으로 치중하였다고 할 수 있다. 밀가루가 쌀보다 영양이 좋은 식품인 것처럼 홍보하여 국민들의 소비를 조장시킨, 1960년도에 시작된 분식장려운동은 그 단편적인 예로 볼 수 있으며 이 때의 식생활 개선 방향이 다분히 정책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표 6〉은 년도별로 외식비의 증가 추세 및 식비의 비율을 제시한 내용이다. 1985년도 이후부터 식비 중 외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1988년 올림픽 등을 대비하여 정부에서는 식찬별 고객 주문식단체를 보급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못하였다. 또 1989년도에는 학교급식 업무가 체육부로 이관되면서 아동들의 전반적인 체력향상을 위한 실질적 의미의 영양급식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맞게 되었다. 교육부에서는 1997년까지 전국 국민학교에 학교급식 전면 확대 실시를 계획하고 있지만 기기 시설 및 식품비 등 소요재원과 학교급식의 효율적인 제도운영

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이 보충되어야 하겠다.

〈표 7〉은 1990년도 국민영양조사 보고서에 나타난 평균 영양권장량에 대한 영양소 섭취 비율의 연차적 추이를 나타낸 결과이며, 〈표 8〉은 우리나라 주요 사인을 연도별로 표시한 도표이다. 이들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연도별로 에너지 섭취량의 변화는 거의 없지만 단백질과 철분의 섭취량은 점점 증가하였으며 1970년대 이후부터 식생활의 불균형과 관련있는 성인병 발병율이 높은것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식생활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보건사회부에서는 1990년 식생활지침을 발표하였으며 정부는 음식물 소비 절약을 위해 좋은식단체를 개발, 전국 요식업소에서 자율적으로 실시중에 있다.

현재 점차로 식품·영양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대하면서 영양불량과 과잉영양이 공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지 양적위주의 단기간에 추진되는 정책이 아닌 식량수급과 소비측면에서 건강지향적인 측면까지 포함되는 총괄적이고도 장기적인 정책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IV. 결 론

신경제 5개년 총량지표에 의하면 우리경제는 1993-1998년에 연평균 6.9%의 실질 성장을 이룩하여 1인당 GNP가 '92년에 6,749 달러에서 오는 '98년에는 14,076 달러로 6년동안에 약 2.1배 늘어날 전망이다.

사람들의 평균 수명도 연장되고 장년층의 사망율도 감소하여 2000년대에는 노인문제가 새로운 사회적 쟁점으로 크게 대두될 것이므로 노인들의 건강, 복지대책 및 식생활 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가공식품의 소비가 늘어나고 대규모 식품유통체제의 구축등이 필요하게 될 것이며 특히 도시 중산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가공식품의 개발도 요구된다고 하겠다.

지금까지의 식생활에 대한 정책은 주로 식품생산 및 수급에 의존하여 계획되었다. 이제는 식품소비 형태 변화에 따른 정책도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한



다. 질병양상이 감염성 질환은 줄어들고 만성퇴행성 질환이 증가하여 식생활 관리가 예방과 치료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소득수준의 향상과 식생활 패턴의 변화로 영양결핍보다 영양과잉과 이로 인한 성인병이 더 큰 관심사로 등장하게 됨으로 인해 과잉영양을 방지하여 성인병 및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식생활의 정립 및 관리에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불 때 식생활관리를 통한 질병예방을 해서 의료비가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국민들의 건강 유지를 위하여 식생활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책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 1) 황혜성, 한복려, 한복진. 한국의 전통식품, 교문사, 서울, 1991
- 2)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식생활 개선 사업 장단기 추진 계획 수립, 1991
- 3) 모수미. 외식 산업의 발달이 국민영양 및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양학회지 19(2) : 120-128, 1986
- 4) 강인희. 한국 식생활 변천사, 식생활개선 범국민운동본부, 서문사, 서울, 1988
- 5) 한국식량영양경제학술협의회. 국민 건강을 위한 식량영양 정책의 필요성, 1989
- 6) 대한영양사회, 한국영양학회. 우리나라 학교급식의 의의와 당면과제, 1990년도 심포지움, 1990
- 7) 보건사회부 자료. 주문식단계 추진계획, 1982
- 8) 국민 식생활문화개선 연구 작업단. 국민 식생활 문화개선 운동 추진 방안, 1991
- 9) 국무총리 행정조사실 자료. 국민 식생활문화개선 운동 추진 방안, 1991
- 10) 보건사회부 자료. 식생활문화개선, 1991
- 11) 보건사회부. 식생활 지침, 1990
- 12) 한국영양학회. 한국인을 위한 식사지침, 1986
- 13) 안효환. 보건사회부 보건주보 제 841호. - 국민 식생활문화개선을 위한 좋은식단 개발보급 -, 1992
- 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 농정 40년사(下), 1989
- 1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 농정 40년사(上), 1989
- 16) 이혜수. 기초영양학, 교문사, 서울, 1992
- 17) 한국인구보건연구원. 한국인의 영양권장량 (제 5차개정), 1991
- 18) 보건사회부. 국민영양조사 보고서, 1990
- 19) 채범석, 신영무. 우리나라 식품 소비 변화에 대한 고찰. - 1960년, 1970년을 중심으로 -, 한국영양학회지, 5(4) : 161, 1972
- 20) 채범석. 한국인의 식품 및 영양소의 섭취 현황과 전망. 한국영양학회지 3(3) : 187-196, 1980
- 21) 농수축산신문. 한국식품연감, 1992
- 22) 통계청. 한국통계월보, 1992
- 23) 한국식품연구소 보고서. 영양과 특수질병과의 상관관계 연구, 1988
- 24) 환경처 자료. 쓰레기 발생량, 1991
- 25) 한국식품연구소 보고서. 좋은식단 실시 방안에 관한 연구, 1992
- 2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사 관계 자료집, 1987
- 27) 보건신문사. 보건연감, 1991
- 28) 통계청. 도시가구 통계연보, 1991

〈표 1〉 연대별 시대적 배경 및 식생활 정책 수행 내용 요약

시대구분	내 용
해방 후 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생활 궁핍</li> <li>○ 초근목피로 생계 유지</li> <li>○ 미곡수집령 제정</li> <li>○ 미곡법 공포</li> <li>○ 미곡수집령 폐기</li> <li>○ 양곡매입법 공포</li> <li>○ 양곡관리법 제정</li> </ul>
195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기아 생활</li> <li>○ 학교급식 시작</li> <li>○ 미국의 잉여 농산물 도입</li> </ul>
196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곡물의 공급량 절대 부족</li> <li>○ 가공식품 시장 형성</li> <li>○ 분식장려 운동 전개</li> <li>○ 전국 절미 운동, 양곡 소비절약 운동 전개</li> <li>○ 소매분의 공장별 생산 책임제도</li> <li>○ 미국 소비 억제를 위한 행정명령 고시</li> <li>○ 한국 잠정 영양기준 마련</li> <li>○ 국민영양조사 시작</li> </ul>
197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풍요로운 식생활로 변화</li> <li>○ 쌀 소비량 감소</li> <li>○ 식생활에서 편의식품의 비율 증가</li> <li>○ 혼분식 장려 운동 전개</li> <li>○ 식생활 개선 운동 전개</li> <li>○ 쌀 소비 억제책 완화</li> <li>○ 빵 식중독 사건으로 학교급식 폐지, 급식 실험학교 설치 운영</li> </ul>
198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산업, 식품서비스산업, 외식산업 등의 발전</li> <li>○ 인스턴트식품 및 가공식품의 섭취 증가</li> <li>○ 주문식단체 보급 추진</li> <li>○ 학교급식법 제정, 공포</li> </ul>
199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의 식품·영양 섭취 증가</li> <li>○ 식생활 지침 작성 발표</li> <li>○ 좋은식단체 실시</li> </ul>

〈표 2〉 보건사회부에서의 식품관련 행정의 변천

1895.3.26	관제개혁에 따라 내부(內部)에 위생국(衛生局)설치 처음으로 보건의무행정(保健醫務行政) 시도
1948.8.15	정부 수립. 보건후생부(保健厚生部)를 사회부 보건국(社會部 保健局)으로 격하
1949.2.10.	보건부(保健部) 독립
1949.6.4.	한국, 세계보건기구 (WHO)에 가입
1951.9.25.	국민의료법안 공포
1954.4.8.	전염병예방법 제정
1954.4.8.	검역법 제정
1955.2.17.	보건부(保健部)와 사회부(社會部)를 통합, 보건사회부(保健社會部)로 발족
1956.8.30.	보건소법 제정
1962.1.20.	식품위생법 공포(公布)
1962.3.5.	보사부, 전국 183개 보건소에 가족계획 상담실 설치
1965.10.23.	보사부, 모자보건법을 성안(成案)
1967.3.10.	학교보건법 제정
1969.6.	첫 국민영양조사 실시
1969.7.23.	보사부, 식품공해기준 마련
1969.10.23	보사부, 식빵 등 7개 품목 제조에 70년 초부터 사이클라메트 등 사용 금지 조식치
1970.7.20.	식품위시행령 공포
1973.5.28.	모자보건법 시행령 공포
1976.4.20.	과자 등 식품명예 외국어 표기 금지
1978.7.8.	성인병 예방조사 국내 첫 실시
1981.2.23.	성인병 환자 등록 의무화
1985.1.31	보사부 직제령 개정, 약무식품국(藥務食品局)을 약정국(藥政局)과 위생국(衛生局)으로 분리
1985.7.1	농수산 가공식품 허가 및 품질 관리 업무 보사부로 일원화
1986.5.10.	공중위생법 제정
1986.11.	공중위생법 시행령 공포
1990.5.7.	보사부 자문기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발족
1990.12.	국민건강생활지침 5개항 제정 공포
1990.	보건교육자문위원회 설치

(자료 : 보건연감, 보건신문사, 1991 )

〈표 3〉 농림수산부에서의 식품관련 행정의 변천

1948.7.17.	농림부(農林部) 설치
1948.9.14.	양곡 공출제(糧穀供出制) 폐지
1949.7.26.	축우 도살 제한법
1949.8.13.	농산물검사법 공포
1949.9.26.	양곡관리법 제정
1951.11.23.	농림부에서 중앙양곡긴급조작 위원회(中央糧穀緊急操作委員會) 구성발족(構成發足)
1958.10.21.	농림부가 농협 중앙회 설립 인가
1962.1.20.	축산물 가공 처리법 제정
1962.7.4.	각령(閣令)제861호로 농구조정책심의회(農業構造政策審議會) 규정 공포
1963.6.26.	축산법 제정
1967.1.7.	농업기본법(農業基本法) 공포
1967.10.31.	농수산물유통공사법 제정 농어촌개발공사법(農漁村開發公社法) 제정
1967.12.1.	농어촌개발공사 발족
1971.1.19.	농수산물수출진흥법 제정
1973.3.3.	농림부에 소속된 산림청이 내무부로 이관, 농림부를 농수산부(農水産部)로 개칭하는 정부조직법 중 개정 법률 공포
1973.7.12.	고미가(高米價) 정책 계속 방침
1974.7.12.	지금까지 곡류 및 감자류만으로 짜왔던 식량 수급 계획의 폭을 넓혀 채소, 과일, 육류, 난류, 어패류등 모든 식품을 망라한 종합 식품 계획으로 대치
1976.12.3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정
1977.1.11.	농수산부, 무미일(無米日) 폐지
1977.10.14.	농수산부, 쌀 7분 도정제 폐지
1981.5.14.	주곡자급(主穀自給) 7개년 계획 확정 발표

(자료 : 농정사 관계자료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7)

〈표 4〉 연도별 전체 양곡의 자급율

년 도	자급율 (%)	년 도	자급율 (%)	년 도	자급율 (%)	년 도	자급율 (%)
1946	94.3	1957	83.1	1968	81.3	1979	59.8
1947	86.0	1958	82.4	1969	73.6	1980	56.0
1948	90.7	1959	97.0	1970	80.5	1981	43.2
1949	98.1	1960	94.5	1971	71.2	1982	53.3
1950	101.3	1961	91.1	1972	70.8	1983	50.2
1951	93.8	1962	90.8	1973	69.4	1984	48.7
1952	84.5	1963	75.5	1974	70.3	1985	48.4
1953	69.9	1964	93.6	1975	73.0	1986	44.5
1954	94.9	1965	93.9	1976	74.1		
1955	97.9	1966	94.7	1977	65.1		
1956	92.1	1967	86.7	1978	72.6		

(자료 : 한국 농정 40년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9)

〈표 5〉 양국의 1인 1년간 소비량 추이

(단위 : kg)

연 도	계	쌀	보리쌀	밀가루	옥수수	콩	서류	기타
1956	175.4	119.8	33.1	9.1	0.3	5.7	3.0	4.4
1957	167.3	103.6	36.6	13.9	1.2	5.3	2.9	3.8
1958	182.5	115.2	37.1	15.9	2.0	5.9	2.7	3.7
1959	165.8	117.5	25.9	8.6	1.0	5.4	2.7	4.7
1960	167.2	112.7	30.8	11.3	0.8	5.2	2.7	3.7
1961	166.5	107.8	39.0	8.3	0.7	4.4	2.9	3.4
1962	174.8	113.9	35.7	12.7	0.6	4.9	3.2	3.8
1963	169.9	101.0	33.1	21.5	1.9	4.5	3.5	4.4
1964	174.3	117.6	26.7	16.3	1.1	4.4	4.1	4.1
1965	188.8	121.8	36.8	13.8	0.9	4.4	7.3	3.8
1966	178.8	112.4	38.9	10.7	0.7	4.7	7.9	3.5
1967	204.4	124.5	45.3	18.5	1.1	4.7	7.2	3.1
1968	205.5	118.3	42.7	27.1	0.7	4.7	9.6	2.4
1969	212.5	120.2	43.3	28.7	1.1	5.4	10.5	3.3
1970	219.4	136.4	37.3	26.1	1.1	5.3	10.2	3.0
1971	224.3	134.8	36.8	32.0	1.4	5.4	11.4	2.5
1972	225.9	134.5	37.5	34.9	1.8	5.1	10.0	2.1
1973	222.1	129.4	39.3	34.6	2.1	5.6	9.1	2.0
1974	208.8	127.8	39.9	24.3	2.2	5.4	7.2	2.0
1975	207.3	123.6	36.3	29.5	2.4	6.4	7.1	2.0
1976	203.5	120.1	34.7	30.2	2.9	6.4	7.2	2.0
1977	203.9	126.4	28.5	30.3	3.3	6.2	7.1	2.1
1978	201.5	134.7	18.1	30.5	2.8	7.0	6.3	2.1
1979	198.8	135.6	14.1	30.6	2.9	7.2	6.3	2.1
1980	195.5	132.7	13.9	29.4	3.1	8.0	6.3	2.1
1981	195.7	131.4	16.0	30.9	2.9	8.2	4.3	2.0
1982	191.8	130.0	13.8	29.7	3.2	8.5	4.6	2.0
1983	185.2	129.5	9.5	30.6	2.5	8.2	3.1	1.8
1984	183.5	130.1	6.2	32.1	2.3	8.3	3.1	1.4
1985	181.7	128.1	4.6	32.1	3.1	9.3	3.1	1.4
1986	179.0	127.7	3.6	31.5	2.8	8.9	3.3	1.2

(자료 : 한국 농정 40년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9)

〈표 6〉 외식비의 증가추세 및 식비의 비율

년 도	1인당 GNP (U.S \$)	가 계 비 (원)	식 비 (원)	외 식 비		외식비/ 식비(%)
				(원)	증가율(%)	
1975	594	65,320	28,478	559	100	2.0
1980	1,592	214,401	77,527	2,871	514	3.7
1985	2,194	341,100	118,898	8,871	1,587	7.5
1986	2,503	374,300	126,658	11,316	2,024	8.9
1987	3,098	432,000	141,216	17,106	3,060	12.1
1988	4,040	509,100	162,827	22,550	4,034	13.8
1989	4,994	657,200	189,500	36,700	6,565	19.4
1990	5,659	755,400	219,500	44,800	8,014	20.4
1991	6,498	895,800	256,900	55,300	9,893	21.5

\* 가계비, 식비, 외식비는 전도시 전가구 월평균임.  
(자료 : 도시가구 통계연보, 통계청, 1991)

〈표 7〉 국민 영양조사 대상의 평균 영양권장량에 대한 영양소 섭취비율의 연차적 추이

영양소	년도	1970	1972	1974	1976	1978	1980	1982	1984	1986	1988	1990
에너지		100.9	88.5	96.7	90.8	87.3	93.5	89.5	90.0	90.8	92.7	90.0
단백질		94.8	93.9	100.3	89.3	91.5	94.6	93.9	103.3	109.9	137.4	127.8
칼슘		81.0	89.1	75.9	69.0	68.7	81.9	63.6	78.5	96.9	84.6	82.0
철분		83.6	94.9	105.5	91.7	79.2	96.4	96.4	101.0	126.9	163.8	173.3

(자료 : 국민 영양 조사 보고서, 보건사회부, 1990)

〈표 8〉 우리나라 주요 사인 연도별 비교

순위	1958-1959	1966-1967	1974	1980	1985-1986
1	폐렴 및 기관지염	폐렴 및 기관지염	악성신생물	악성신생물	뇌혈관질환
2	결핵	결핵	뇌혈관질환	뇌혈관질환	고혈압성질환
3	위장염	뇌혈관질환	고혈압성질환	불의의사고 및 부작용	폐순환질환 및 기타 심질환
4	악성신생물	악성신생물	사고	고혈압성질환	위의 악성신생물
5	뇌혈관질환	위장염	결핵	중독 및 독성영향	만성간질환 및 경변증
6	심장질환	사고	기관지염 폐기종	심장정지	간의 악성 신생물
7	사고	심장질환	폐렴	만성간질환 및 경화증	교통사고
8	-	-	기타심장질환	결핵	기타 불의의 사고
9	-	-	간경변	자살	결핵
10	-	-	병인불명	징후증상 및 불명확한 병태	기관지염·폐기종 및 천식

(자료 : 영양과 특수질병과의 상관관계 연구, 한국식품연구소 보고서, 1988)